

“해수부, 일본 오염수 피해 대책 마련해야”

서삼석, 농해수위 현안 질의에서 장관 질타 “피해 예측 못하는 건 해양수산부 직무유기” 소금 가격 논란엔 “가격 상승 아니라 회복”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1일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우리 정부는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한다”며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주부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직

격했다.

해양수산부·해경·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이하 해양·수산 종사자)’는 총 111만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조원(2020년 기준) 수준이다. 이 중 수산업 종사자는 88만명으로 전체 해양·수산 종사자의 79%를 차지한다. 매출도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수부는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 예측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해양수산부가 2011년과 2013년



“오염수 해양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산물 소비 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 해태”라며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양보 못해”

‘日, WTO에 더 제소 않기로’ 보도에 “타국 선의에 의존 안해” 국무1차장 “日정부 공식 입장 발표 없었다…사실관계 확인 중”

정부는 2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일본측이 세계 무역기구(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측의(대응)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압박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으며, WTO는 2018년 2월 한국에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2019년 4월 무역분쟁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 판정에서 뒤집혔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차장은 전날 보도를 언급,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서만쯤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또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사례에 관련해 설명했다.

ALPS는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에서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설비 부식, 전처리설비 필터 문제, 배기 필터 문제 등 총 8건의 ALPS 고장 발생을 확인했으며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차장은 “전날 ‘정부가 ALPS가 8차례 고장났다고 밝혔는데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4건이 더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4건은 별개의 건이라 이미 설명한 바 있는 8건에 포함해서 분석 중인 사안이며, ALPS 출고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 선임

“현안 꼼꼼히 챙겨 지역 발전 동력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소 의원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퇴임한 후에는 검찰 고위직 간부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농협대와 순천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그는 전반기 법사위에서 20년 국회 장벽에 갇혔던 여순사건특별법을 행안위·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전공대법·농촌사랑기부금법·아



시아문화전당법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다른 상임위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토론과 설득으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 의원은 “민생 입법이 법사위에서 신속히 통과되고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감사·결재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아울러 호남 지역구 출신 유일한 법사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지역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이용빈 ‘라이다 융합산업 간담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라이다 융합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산중위 전체회의 때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 기업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를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 7개 대기업과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4개 라



이다 제조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 자율주행 센서의 내재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레이저 다이오드·광검출소자 등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차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